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2026. 1.



국민권익위원회

순서

I.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성과 및 여건 1

1.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주요 성과 3
2.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여건 6

II.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 과제 ... 7

1. 반부패 법·제도 강화로 공직사회 체질 개선 9
 - 1) 청탁금지제도 규범력 제고 9
 - 2)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로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12
 -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15
 - 4)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강화 18
 - 5)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체계 구축 19
2.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관행 근절 24
 - 1) 실효적 반부패 대응체계 마련 24
 - 2) 공공재정 누수 방지 노력 27
 - 3)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강화 30
 - 4)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32
 - 5) 교육분야 등 자치법규 부패·불공정 유발 요인 개선 34

순 서

3.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 확산	36
1)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수준 향상 촉진	36
2) 공직자 교육 수요를 반영한 부패방지교육	40
3)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46
4)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지원	47

Ⅲ. 기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49

1. 지식재산처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51
2. 경기도교육청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54

[참고자료] 57

1. '26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 운영 일정	59
2. '26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 이러닝 주요 과정 소개 ...	62
3.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개발 교육 콘텐츠 주요 목록	65

[부 록] 67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69
2. 부서별 업무담당자	74

I

반부패 · 청렴 정책 추진 성과 및 여건

[행정기관] 2026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1 공직사회 부패관행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부패통제장치 구축

□ 국민 신뢰에 기반한 공직자 행위규범의 운영

-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질의·회신집 제작*, 제도 운영 미흡기관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기관별 관리 역량 강화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 총 4,694건 중 외부강의 관련 질의는 1,100건으로 약 24% 비율 차지('23~'25.8.)

- 공직자 및 국민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

※ 지방의회 맞춤형 가이드라인 배포(7월), 권역별 설명회(9월), 홍보영상·물품 제작 및 배포, 이해충돌 자가진단 QR 배포 등

※ 설문조사 결과, 전년대비 공직자의 법 준수도('24년 47.9%→ '25년 48.8%) 및 법 효과성('24년 67.8%→ '25년 68.5%)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 민생·교육현장 속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 점검 및 개선

※ 설·추석 명절 선물 수수 등 부패취약시기 전후 집중 점검, 17개 시·도교육청 행동강령 운영실태 전수 점검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및 공정채용 제도 정착

-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공정채용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채용비리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여

* '19년도 전수조사(182건) 대비 '25년도 전수조사(34건) 적발건수 약 81.3% 감소 ↓

-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결과, 취업기회 부문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2.7%p 증가('25.1월, 53.0%)

□ 법령에 내재된 부패·불공정 요인 개선

-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을 정밀 평가하여 법규정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을 선제적 차단

※ '22년~'25년 간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전수점검으로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 공공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강화 등 7,705건 개선권고

2

대내외 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제고

□ 국제사회·민간부문과의 교류·협력으로 청렴문화 확산

-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순위 기록** ('25.2월 발표, '25년 결과는 '26.2월경 발표 예정)

* ('16년) 53점, 52위 → ('18년) 57점, 45위 → ('21년) 62점, 32위 → ('24년) 64점, 30위

- PRS* 평가의 '정치시스템 내부 부패' 항목은 전년대비 **0.25점 상승**,
WEF** 평가의 '공적자금 유용정도' 항목은 최근 **10년간 최고점 기록**

* 정치위기관리그룹(Political Risk Service Group) / **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 종합청렴도 평가·컨설팅을 통한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 촉진

- 중앙·지자체는 물론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연구원 등 사각지대없이 공공부문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우수기관 대상 국외 연수 지원, 평가 저조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평가결과에 대한 촘촘한 피드백 지원

* '25년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의 **66.7%가 등급 상승 효과**, 그 중 5개 기관은 2~3계단 상승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남**

□ 공직자 및 미래세대 청렴교육 지원으로 청렴문화 확산

- 청렴교육 전문기관인 청렴연수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공급*, 찾아가는교육 등 공공기관의 자체 부패방지교육 운영을 밀착 지원

* 초등·대학생용 청렴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공직자 청렴리더십 강의안 개발 등

※ 법정의무사항인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의 **이수율 96.0%** 기록

- 미래세대인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렴교육을 활성화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

* 41개 교육청·대학과의 MOU 체결, **4개 대학에서 청렴 관련 정규 교과 개설**,
142개 초등학교에서 권익위가 배포(8월)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청렴교육 실시

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및 부패현안 적극 대응

□ 취약분야 기획 실태조사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패 사각지대 해소

- 고강도 실태조사를 통한 부패 관행 적발, 실태조사 결과는 언론 브리핑·보도자료 배포·카드뉴스 등을 통해 국민께 공유

*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수산종자 방류사업에서 **입찰비리(103억)**, **납품비리(68억)** 등을 적발하고, 입찰 제도를 투명히 하도록 개선 권고('25.7.30. 언론브리핑)

-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통해 부패행위로 인한 부정이익은 환수토록 조치하는 등 부패 관행 근절 노력

□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 조사와 제도 교육 홍보로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

-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처리*로 부정수급 적발·처벌, 부정 이익은 국고로 환수**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 신고사건 이첩·송부건수 전년대비 15.3% 증가:('24년) 255건 → ('25년) 294건, 평균처리기간 전년대비 17.5% 감축 ※('24년) 63.3일 → ('25년) 52.2일

** '24년도 부정수급 환수액은 704억 원으로, 전년대비 164억원 증가('25.7~10월 점검)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 (적극적 보상)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을 신고자에게 신속히* 보전하고, 보상 범위도 확대**

* 구조금 신청건은 증가 : ('23년) 48건 → ('24년) 62건 → ('25년) 123건, 평균 처리일은 단축 : ('23년) 206일 → ('24년) 87일 → ('25년) 61일

** 구조금 중 통원치료비 지급한도 2배, 수사 중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한도 3배 각 상향

- (신속한 보호) 조사인력 멘토링제 도입등으로 보호조치 신청건을 신속 처리*, 당사자간 화해 권고 제도로 종국적 의미의 갈등 해결

* 보호사건 접수건은 급증 : ('23년) 297건 → ('24년) 466건 → ('25년) 1,025건, 평균 처리일은 단축 : ('23년) 158.3일 → ('24년) 76.6일 → ('25년) 45.8일

□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기반 구축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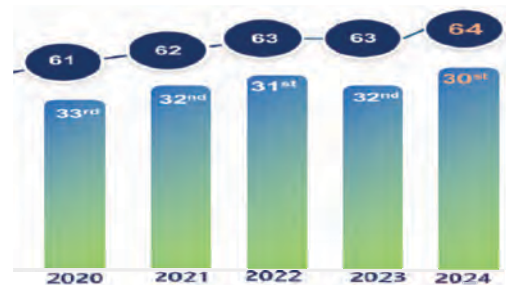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가 높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본격적 개혁이 시작되는 상황

※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65%('25.6월 여론조사)

-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 청렴도(CPI) 20위권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기반을 조기에 단단히 구축해야 함

* (국정과제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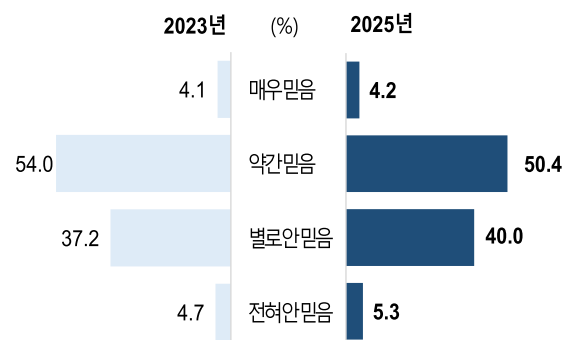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



□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수준 제고 요구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4.6%로 2년 전 대비 감소하여, 공직자 중심의 부패방지 정책에서 사회 전반의 신뢰 제고로 정책확대 요구

<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



('25.5. 국가데이터처)

□ 청렴문화의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필요

-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상승에 힘입어 부패·불공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 필요

※ ▶ CPI 1% 증가시 무역비용 0.406% 감소(KIEP, 2017)

▶ CPI 1점 상승시 1인당 GDP 2.64% 상승 효과 관찰(한국행정학회, 2024)

- 범정부 차원의 청렴정책 추진,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 청렴교육 실시로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기대

※ 학교 시스템의 활용은 어린 청소년들의 청렴의식 고취에 매우 중요(OECD, 2018)

II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 과제

[행정기관]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1 청탁금지제도 규범력 제고

- ◇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춘 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태점검·교육 등으로 반부패 행위규범의 규범력 제고

□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적극 대응 국정과제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신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자 처벌 강화*,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벌칙 수준 상향

* (현행)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개정)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법률 개정내용

- (민간대상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인사·협찬 등 10가지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
- (예외사유) 민원·입법·예산 및 일반 행정업무 수행 등 공직자등의 직무활동이나 민간 부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추가
- (위반시 제재) 현행 청탁금지법상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청탁금지법령 현실화 국정과제

-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국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상향 검토

【참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

- (현행) 외부강의시 일반공직자와 교직원·언론사 임직원간 사례금 상한액 구분
-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연구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실태점검」으로 법 집행력 강화

-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내역, 자체 교육 현황 및 청탁 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전반적인 제도 관리 현황을 점검(1~8월)
 - 기관에서 제출한 사건처리 중 위반행위자 과태료 통보 누락 등 부적절한 신고처리 사례 발굴 및 해당 사례 시정조치 통보 및 이행 여부 관리
- * 서면·현지점검(1~5월), 부적절 처리사례 등 시정통보·이행관리(~7월), 결과발표(8월)

【참고】 '25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시정조치 사례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세트 약 30만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수자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으나,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을 관할법원에 하지 않음
 - ☞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금품 제공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통보
-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계약 상대방인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약 30만원을 제공받은 사건에서 공직유관단체는 관할법원에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을 각각 진행하였으나,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지 않음
 - ☞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금품 제공자 소속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통보

□ 청탁금지법 맞춤형 교육·홍보 추진으로 기관별 제도운영 지원

- 권역별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제도운영 설명회를 진행하여 주요 해석 기준, 위반신고 빈발사례, 최신판례 등을 전파하여 제도운영 역량 제고(상반기)
 - 기관유형별*로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법 적용대상자별 업무특성이 반영된 내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 추진
- * [행정분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교육분야] 교육청, 각급 학교 등
- 설·추석명절 등 금품수수 질의가 급증하는 시기별로 주요 유의사항을 각 기관에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위반사항 사전 예방(수시)
 - 공직자 행위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 판단기준, 기관별 신고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여 홍보 효과 제고

□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계기 사회적 인식 제고** 신규추진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의 공직자·국민의 인식 전환·행태변화 성과분석, 우수 체감사례 공유 및 제도 발전방안 모색 위한 의견수렴 추진

[협조 요청 사항]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 협조(전 공공기관)
 - 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점검 자료 제출, 실태점검 온라인 설명회 참석(1~3월) 및 현지점검 방문협조(4~5월)
 - ※ 실태점검 서면점검 자료 제출 기한, 점검 양식 준수, 내역 현행화 등 유의
 - ※ 시행 10주년 계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재발방지 및 예방 우수사례 제출요청 예정
 - 신고처리 부적절 사례 등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협조(하반기)
-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등 교육·홍보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교육)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상반기)
 - (홍보) 설·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자료(카드뉴스, 홈페이지 배너 등) 배포 및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협조를 통해 소속직원이 숙지하도록 안내(수시)

2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로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 ◇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상 나타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 및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 이행력 제고

□ 이해충돌방지법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등 내실화 방안 추진 **국정과제**
 - ※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8월)

【국정과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사항】

- **(민간활동 내역 공개)**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만 있으나, 이를 공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외부의 실질적 감시 보장
- **(사적이해관계법인 확인·관리)** 공직자에게, 본인이나 그 가족 등이 대표이거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있는 경우 그 정보(명칭, 보유 지분 등)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 부과
- **(징계·과태료)** 허위·불성실 이해충돌 신고자 및 사적이해관계 신고 이후 관련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자 등

□ 이해충돌방지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운영 지원

- **(실태조사)** 각급 기관 반부패 행위규범 제도운영 현황 조사 실시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주요 행위 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제도 운영현황 조사' 실시(8~12월)
- **(취약분야 점검)** 위반사례 빈발 취약분야* 제도 운영실태 확인·점검 **신규추진**
 - * 전년도 쉰 공공기관 실태조사 분석 결과 등 활용 점검대상 선정(상반기)

□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 (교육) 공직자의 법 이해도 및 민감도 제고를 통해 행위규범 내제화 유도
 - 기관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이해충돌방지법 직접교육*(연중)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대상 주요 유의사항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4~5월)
 - * 각 기관에서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강의 관련 지원 요청 가능
- (홍보) 공직자·국민의 법 인식도 향상을 위해 법 주요내용 홍보 전개
 - 이해충돌방지법의 쉬운 이해와 적용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개
 - ① 주요 법령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국민권익위 블로그, SNS 등에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배포(분기별)
 - ② 행위기준 관련 해석·적용 기준을 반영한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12월)

[협조 요청 사항]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협조(전 공공기관)
 - 기관별 제도 운영현황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협조(8~12월)
- 이해충돌 방지제도 취약분야 확인·점검 협조(해당 기관)
 - '25년 취약분야 점검 대상기관 선정 시, 서면·현장조사 협조(상반기)
- 공직자의 수범성 제고를 위한 자체 점검 등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 수시 배포되는 제도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소속 공직자의 의무 이행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법 위반 분야 재발 방지 노력 등 전개
 -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이해충돌방지법 의무사항 교육·점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 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는 경우,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해당 기관)
 -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법 제18조)
 - ※ 조사기관은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하고,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위원회에 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23조)
-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 교육 이행(전 공공기관)
 - 소속 공직자들이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지원 요청
-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대상 교육·안내를 위한 제도 설명회 참여(4~5월)
- 제도 운영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전 공공기관)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유도 및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행동강령 규율 강화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기준 강화

- (국정과제 적법·타당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 신설 추진)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에 맞추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
 - 직무수행의 적법·타당성 및 적극행정 신설 등 행동강령의 규율 사항을 확대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
 - ※ 제8조제2항4호 직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준수하고 적극행정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 신설되는 행위기준 위반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및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제출, '26.8월)
- (국정과제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하급자가 사비로 순번을 정하여 상급자에게 식사 제공 등 잘못된 공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
 - (신고사건 처리) 일선 공직현장의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을 통해 적극 조사 및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 잘못된 공직관행에 대한 공직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홍보 신고기간 운영('26.5.~7.)

□ 행동강령 운영기관에 대한 상시 이행실태 점검체계 구축

○ 부패 취약시기 집중점검 및 즉각 대응으로 공직기강 해이 예방

- (부패취약시기) 설·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품·선물 수수, 알선청탁 등 집중 점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기관 대상

【주요 적발사례】 : 해당기관에 통보 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 ✓ 군청 과장급 공무원이 하급자로부터 시가 48만원 상당의 한우 · 과일 선물세트 수수
- ✓ 군청 공무원이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시가 42만원 상당의 한과 선물세트 수수

- (수시점검) 지자체장 등 언론보도사건 등을 반영해 행위규범 위반 사항을 수시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슈 즉시 대응 및 관련기관 전파

※ 기관장의 갑질 및 사적노무 요구, 직무관련자 경조사 통지 등 현안사항 발생 시 현지 긴급점검 실시

○ 갑질 행위, 위반사항 장기간 미조치 등 부패취약분야 집중점검

- (공공기관 갑질·부조리 개선) 일선현장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외부강의 미신고 및 조직 내 잘못된 공직관행 등 근절

※ 2025년 청렴도 평가, 규모, 지역 등 고려 20~30개 선정

- (행동강령 신고사건 사후관리 강화) 지자체의 행동강령 신고 처리 현황 점검 후 장기간 미처리, 징계·환수 미실시 등 온정적 처리 관행 개선

※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이첩·송부처리에 대한 상습적 장기 미회신 기관 10~20개 선정

- (신규공직유관단체 운영 지원) 공직유관단체 지정 3년차 기관의 행동강령 조기 정착 지원 및 소속 임직원의 공직자 인식 강화

※ 2022년 지정된 공직유관단체(53개) 중 감독기관·지역 등 고려 20~30개 선정

[협조 요청 사항]

- 행동강령 개정사항은 기관별 행동강령에 조속히 반영(전 공공기관)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될 경우 ① 자체 행동강령 개정 전문, ② 신·구 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송부
 - ※ 위원회에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은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 시정·권고사항 신속히 반영
- 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이행점검 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해당 공공기관)
 -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이첩·송부시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완료 후 위원회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 행동강령 위반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해당 관계기관은 적절한 조치, 제도개선 검토 등 협조
- 기관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 대상 갑질 금지,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자율적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 적극 전개
 - ※ 필요 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국정과제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숙지 및 안내의 적시성 확보를 통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을 예방하고 비위면직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제도 개요

- **(대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제한 기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 **(제한 기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

□ 실태점검 및 제재

- **(실태점검)** 취업이 확인*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검토를 위해 업무내역 등을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하여 점검
*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을 통해 위원회가 비위면직자 취업 여부를 확인
- **(위반자 제재)**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취업해제 강구·고발 조치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구

[협조 요청 사항]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활용(상시, 전 공공기관)
* '25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25년 개정본 공개
- 취업제한제도 즉시 안내 및 대장 관리(수시, 전 공공기관)
- 취업제한 실태점검, 제도 운영상황 확인 시 협조(수시, 전 공공기관)

◇ 신고자가 전방위적 보호 체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도부터 운영까지 실질적 보호와 보상을 통한 지원 추진

<신규> 공익신고 대상확대(내란죄 등), 보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반부패 5개 법률의 신고자 보호·지원 법제 고도화

○ (공익신고 대상확대) 내란죄 등 공익을 침해하는 「형법」상의 일부 범죄 등을 포함하여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 **국정과제** **신규추진**

- 공·사익이 모두 규정된 법률의 경우 공익 부분만 한정하여 대상 법률에 포함, 매년 공익신고 대상법률 정비 등 방안 마련

* 법률자문·연구용역을 거쳐 입법 가능 부분 발굴 및 개정 추진

○ (보호·지원 강화)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부패 5개 법률* 전면 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 (보호·지원 통일)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참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부방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신법** 개정 (안)

유형		보호·지원 강화 주요 내용
보호대상		• 부패신고 보호 대상을 감사원, 수사기관 신고까지 확대 부방법
보호범위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①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제도 도입 및 미이행시 처벌기준 신설 공신법 , 보호조치 신청 각하사유 축소 공신법 ② 불이익조치 위반시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 신설 부방법 ③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신설 부방법
	신변보호	• 신변보호조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 부방법
	책임감면	•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지, 신고금지규정 무효 등 부방법
지원방법		• 비실명 대리신고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근거 명확화 부방법 공신법

- (처벌강화)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상 신고자 보호 위반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반부패 5개 법률의 처벌기준을 통일

【 보호규정 위반시 처벌기준 개정 (안) 】		
위법 행위	(기존) 처벌기준	(강화) 처벌기준
• 비밀보장	3년/ 3천만원	5년/ 5천만원
• 보호조치불이행·신분상 불이익 조치	2년/ 2천만원	3년/ 3천만원
• 신고방해·취소강요·그 외 불이익 조치	1년/ 1천만원	2년/ 2천만원
•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3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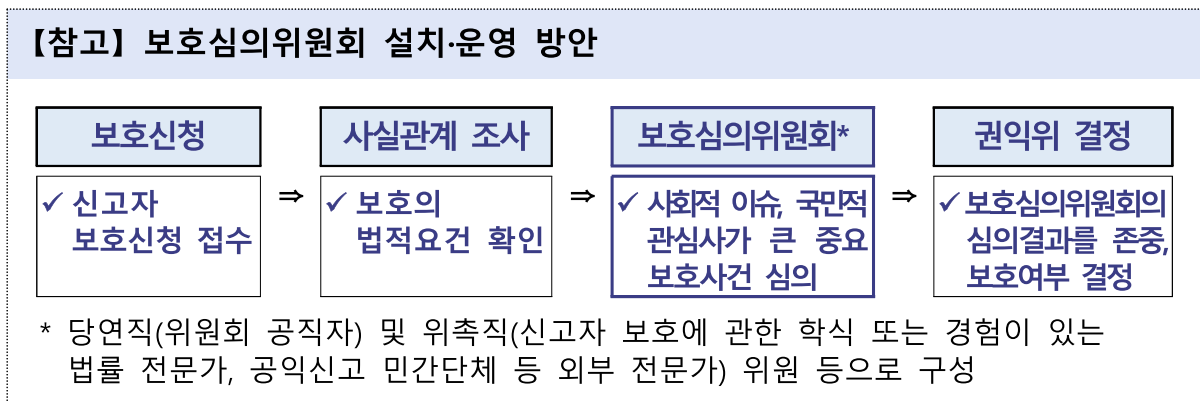
- (과태료 주체) 신고자 보호 관련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상 조사 요구 등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주체를 권익위로 일원화
- * 현행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는 법원으로, 그 외 반부패 3법은 모두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 주체

□ 부패·공익신고자 맞춤형 보호체계 강화

- (조직개편) 신고자보호과를 ‘부패신고자보호과’, ‘공익신고자보호과’로 확대·개편하여 부패·공익신고자별 특화된 보호조치(‘25.12.30.시행)
- ※ (현행) 1과 13명 → (개편) 2과 18명 (+1과 부서 신설, +5명 인력 증원)

- (보호심의 강화) 보호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와 보호 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관 참여 보호심의위원회 구성 국정과제 신규추진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중(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26.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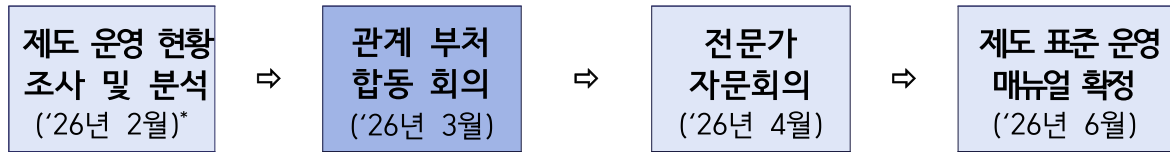


- 신고자 불이익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제도, 책임감면 및 이행점검 강화 등 전방위적 대응 강화
 - (화해권고) 보호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첨예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의 종국적 해결 도모
 - * 신청인-피신청인간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안정적 직무 복귀 등을 보장하는 수단이나, 화해권고 적용 난이도가 높아 활용이 어려움('25년 화해 권고 8건)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하여 형사재판 등을 받는 경우,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적극 의견 제출 등으로 적극 보호
 - ※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은 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금지하는 등으로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 존재
 - (이행점검 등)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부적정 사항에 대한 고발조치 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상황 확실하게 해소
 - *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신분을 공개한 자 등에 대해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하여 유사 위반행위 사전 예방

□ 포상금 제도 정비 및 활성화

- (개요) 부패·공익신고로 피신고자에게 징역형 등 사법처분 및 인·허가 취소 등 비금전적 행정처분,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이 발생한 경우 포상금 지급
 - 공공기관의 추천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공익증진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5억원 지급
- (운영) 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상·하반기 2회로 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요청 예정
 - 위원회의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26년 7월 및 12월경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제도 정비)** 원활한 신고와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 신고 포상금 제도 조사 및 개선 추진 신규추진



- 40개 부처, 138개 신고포상금제도 현황 조사 및 분석(‘26년 2월), 관계부처 합동회의*(26년 3월)
- * 실태조사 결과 공유, 부처 개선의견 등 취합
-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표준매뉴얼 마련·전파 (‘26년 6월)

□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이행력 제고

- **(실태조사)** ‘25년도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운영현황 서면·현장 실태조사 실시*(1~3월 서면, 4~5월 현장)
 - *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창구 설치 현황 자체 운영규정 제정 책임관 지정 자체 보포상금 운영 등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신고 빈발분야에 대한 철저한 사건 처리 및 선제적 예방 활동 등 각급 기관의 자율적 노력 지원
 - ※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한 기관 담당자에게 위원장 표창 수여 예정(12.9 공익신고의 날)
- **(실무자 교육)** 현장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교육 지원
 - **(권역별 교육)** 중앙·지방·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감사 및 민원업무 실무자를 중심으로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상반기)
 - **(교육영상 제작)** 신고 접수기관 담당자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신고자 보호·지원 영상 교육자료 제작(하반기)
 - ※ 다양한 부패·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표준화된 영상 교육자료를 쉽게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포
 - **(맞춤형 교육)** 공익신고 빈발분야(도로교통법 등) 및 신고자 보호 취약 분야(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를 중심으로 교육 신청 기관 대상 찾아가는 실무자 맞춤형 교육 제공(연중)

[협조 요청 사항]

-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 (해당 기관)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미제출 등 비협조시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감점 사항으로 반영
- 기관 차원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화해방안 모색·협조 등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 노력(전 공공기관)
 - * 신고 접수·조사 및 대내·외 공문 시행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등 비식별 처리 및 정보 공개범위 최소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철저
 - ** 내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징계, 전보, 성과평가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준수
-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불이익조치자 징계 등 조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해당 기관)
 - ※ 요구사항 미이행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사항으로 반영
- 자체 사전검증 후 포상금 대상자 적극 추천(5월 및 10월, 전 공공기관)
- 신고포상금제도 실태조사 협조(2월), 관계기관 합동회의 참석(3월)
- 위원회 주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협조 요청('26.1~5월, 해당기관)
 - ※ 공익신고 접수·처리, 자체 운영규정 제정 현황, 책임관 지정 현황, 자체 보·포상금 운영 현황, 공익신고 창구 설치 현황 등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부서 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회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자체교육 실시(해당기관)
-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관련 교육영상 배포시 기관별 정책고객·이해관계자·SNS 등을 통한 확산·배포 협조 요청(해당기관)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 개최(하반기 과장급 이상) 시 적극 참여 요청(해당기관)

1 **실효적 반부패 대응체계 마련**

- ◇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
- ◇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의 예산집행 및 재물운용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발굴·조치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 **실질적 조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국정과제 신규추진

- **(법률개정)** 부패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여 신고사건 조사 및 실태조사 권한을 강화
 -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강화하고, 피신고자 조사 및 재조사 기능을 개선하여 부패행위 조사의 사각지대 보완

【참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주요 개정 내용

- **(자료요구권 강화)**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응시 이행강제수단(과태료 부과 등) 마련
 - *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과세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구
 - *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 **(실질적 피신고자 조사)** 부패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진술·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조사 내실화)** 조사기관으로 송부한 부패사건 처리가 미흡한 경우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지침개정)** 법령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신고사건 처리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사무 운영지침 개정

※ 송부사건 처리절차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 접수절차 등 정비

□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신고접수)** 신고자가 청렴포털에서 공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사건 철저히 관리
 - 신고자는 신고사건 처리 단계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므로 신속하게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신고사건 관리 강화
-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정 처리기간 내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리 철저
 - ※ 조사기관은 60일 이내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해야 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1항)
- **(장기 미회신 사건)** 이첩·송부 후 6개월 이상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 반기별로 공문 발송 및 기관방문 등을 통해 조사 독려
 - ※ 신고사건을 이첩·송부받은 기관은 감사·수사·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2항)
- **(자료공유 강화)**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 결과 자료(수사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공유·협력 강화

□ 부패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25.9.1.)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으로 예산의 방만 집행 관행 근절
 - 부적정하게 집행된 교육훈련비 등에 대해서는 감사·조사 등을 통해 예산상·신분상 조치, 환수 등 필요한 조치 요청
- * '26.1.15. 기준 10개 기관 중 2개 기관의 후속 조치 결과 미제출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 9개 기관에서 25억 원 상당의 교육훈련비 집행 부적정 확인, 1개 기관에서 약 800만 원 상당 미응시 응시료 지원 및 환불금 편취 확인

○ 지방정부 소속·산하 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부패 사각 지대 발굴 및 개선

- 공무용 차량 등 공용물 사적 사용, 시간외근무 등 각종 수당 부당 수령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25.12.6.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무용 차량 운영 실태조사 결과 통보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무용 차량 운영 실태조사 결과】

■ 2개 기관에서 공무용 차량의 공무 외 사용 사례 확인, 공무용 차량을 운영 중인 599개 기관에 대한 관련 기준 정비 및 체크리스트 회신 요청

[협조 요청 사항]

○ 이첩·송부 사건 법정 처리기한 내 적극 이행 협조(해당기관)

※ 조사 기한 내 처리 불가 시 권익위에 기한 연장 통보

○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시 협조(해당기관)

※ 반기별 이첩사건 점검 공문시행 시 자료 협조

○ 조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결과 자료 공유(해당기관)

※ 부패·공익침해행위 조사 관련 수사의견서 등 권익위에 제출 적극 협조

※ 공공기관 청렴포털에 조사(수사) 결과 입력(업로드) 등 적극 이행

○ 신고자가 청렴포털에서 공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신고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처리 담당자를 신속하게 지정(해당 기관)

○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후속조치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기관은 상반기 중 회신(해당기관)

2 공공재정 누수 방지 노력

- ◇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이행실태 점검** 강화, 각급기관의 **환수 역량 강화** 지원, 빈발 분야 신고 **활성화** 등으로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처분 점검 강화

- **(이행실태 점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310개) 대상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
 - 이행실태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후속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안내

【'25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문제점】

- 환수 처분만 하고 제재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고, 미부과사유도 기재하지 않음
- 환수 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시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심판/소송에서 패소
- 공공재정지급금 명칭 등을 점검 서식 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 처분실적이 있으나, 없다고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

- '26년 현지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제도 운영상황 점검, 애로 사항 청취, 우수사례 수집·전파 추진
- **(재정누수 집중점검)** 공공재정이 본래의 정책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 되도록 부당집행,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
- **(자체점검 노력 견인)**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기관별 점검 노력 및 이행실태 점검 협조 노력을 청렴노력도 지표로 평가

※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중앙부처·지방정부·교육청·공직유관단체) 및 '이행실태 점검 협조 노력'(중앙부처·지방정부·교육청)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

□ **각급 기관 환수제도 운영 지원 강화**

- **(교육 활성화)** 각급 기관 사업담당자 및 민간사업자 대상 부정청구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 이행에 대한 적극 교육 실시
 - 감사·사업담당자, 직역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설명, 분야별 신고사건 처리사례 소개 등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진단, 신고사건 조사 및 청렴노력도 관련 기관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사업담당, 직역별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제공

※ 최신 교육자료(PDF)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게시 완료(정책·정보→부패방지자료실)
 - **(사례집 제공)** 유형별 부정수급 신고사건 처리사례를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여 전 기관에 공유
 - **(유공 포상)**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제도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유공 포상을 확대하여 기관 담당자 사기진작 도모
- ※ '25년 위원장상 2점 신설

□ **부정수급 빈발분야 집중신고 및 협업 홍보 추진**

- **(집중신고)**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국민 인식 제고 및 신고 활성화 유도
- ※ 집중신고기간 운영 분야 및 시기는 추후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자진신고제도를 함께 홍보하여 적발·처분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약하고 누수된 재정 회복에 기여
- ※ 자진신고제도 : 행정청의 환수처분 등 사전통지 전에 부정수급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감경(1/2) 또는 면제
- **(협업 홍보)** 각급 기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공공재정 환수제도 (부정수급 금지 및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 홍보 추진

[협조 요청 사항]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적극 협조(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310개 공공기관)
 - ※ '25년 하반기 부정수급 제재 처분 현황 제출 협조(세부 일정 별도 통보 예정)
- 위원회 주관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참여 및 기관별 자체 교육 적극 실시(전 공공기관)
 - ※ 교육·컨설팅 대상기관은 추후 통보 예정
- 각 기관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집중신고 기간 홍보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 집중신고기간 운영 협조 공문 발송 예정
- 환수제도 운영 유공 포상 추천자 권익위에 적극 추천(해당 공공기관)
 -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유공 포상 대상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예정

3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강화

- ◇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채용비리 적발과 제도개선 등 채용비리 예방을 통해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인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점검·관리 강화

- (비공무원) 행정기관 비공무원(기간제·공무직 등)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9월)

* '23.3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자체 규정화 외 비공무원 채용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한 바 있음

- (대상)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건 중 감사 대상은 기관 규모 및 성격을 감안하여 자체 선정
- (방법) 기관별 운영중인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후속조치)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등 실시

*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조치

- (산하기관)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25년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 점검(2~10월)

- (대상) 필수조사* 608개 기관 및 재량조사** 894개 기관

* 기재부·행안부 주관 '경영평가' 대상,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 발생기관 및 '25년도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적발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채용절차 위반이 지적된 기관 등

- (방법) 감독기관 조사와 위원회 주관* 조사 병행 실시

* 위원회는 채용비리 채용실태조사 시 반복적발된 기관(17개),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 중 '징계' 이상 적발 기관(6개) 등에 대해 직접 조사 예정

- (후속조치)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등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자체감사 실시 협조(중앙·지자체·교육청)
 - 기관 성격에 맞게 감사대상 자체 선정 후 기관별 '비공무원 공정 채용 기준'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실시
- '26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적극 협조(감독기관)
 - 산하 공직유관단체 대상 조사 실시 및 결과 회신(~10.23, 기한엄수), 전수조사 후속조치(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이행
 - 위원회가 직접조사 예정인 기관(23개)의 경우 감독기관의 별도 조사는 불필요하나,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후 그 결과를 위원회 통보 요망
 - 합동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협의바라며, 감독기관 설명회 적극 참여 요망(2~3월 2회 개최 예정)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협조(해당기관)
 - 피신고기관인 경우, 자료제출·현지조사 등 요청에 적극 협조
 - 감독기관 등 조사기관인 경우,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및 위원회로 조사결과 통보 등

4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효과 확산 기여

□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 노동자 등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6년 제도개선 추진 과제(안)】

- 국가 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방안
 - (문제점) 공인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면접시험의 경우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없어 공정성 저해 우려
 - (개선방향) 사전에 각 문항별로 필수 답변 요소를 정하는 등 채점 기준을 수립하여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 계약직 근로자 연차 사용환경 개선방안
 - (문제점) 계약종료일이 속한 달에 연차가 추가 발생하여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방법이 없어 불합리함 발생
 - (개선방향) 계약 마지막 달에 발생될 연차를 선지급 하거나, 정규직 전환 시 해당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마련

□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 (맞춤형 관리) 이행 저조기관에 대한 맞춤형 이행관리(수시)
 - 미이행 과제의 조속한 이행방안 협의 및 대체방안 논의를 위해 기관별 컨설팅 실시('26.6월~)
 - ※ 권고 이행률이 저조한 기관은 컨설팅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컨설팅 추진
 - 전수점검 자료 미제출, 이행률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확인이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한 현장 이행실태 점검 실시('26.11월~)
 -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권고 과제 등은 언론 공표 등을 통해 이행 독려

- (장기 미이행 과제) 제도개선 권고 이후 조치기한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미이행 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전수 점검 실시('26.3월~)
 - 점검 결과, 권고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고 국민 입장에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재권고 검토

[협조 요청 사항]

-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조회 시기
기한 내 제출 (전 공공기관)
- 이행현황 서면 전수점검 시 이행실적 제출 (전 공공기관)
 - ※ 이행컨설팅 수요 기관의 경우 신청서 제출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5 교육분야 등 자치법규 부패·불공정 유발 요인 개선

- ◇ 교육청 조례·규칙 등 교육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교육현장의 청렴 문화 정착

□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

- (부패영향평가)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의 인사·채용, 학생 선발·지원 사업 등 교육·학교행정 부패 빈발 분야 관련 규정을 정밀 분석하여 불합리·불공정 관행, 부조리 유발요인 집중 발굴

※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평가(3~10월), 개선권고(11월 권고 예정)

【교육분야 부패 빈발 유형 개선과제(예시)】

- (학교시설 공사·용역 계약) 업체 선정 기준 및 계약 절차, 예산사용 시 재량규정
- (방과후 학교·돌봄교실) 강사 선정기준, 평가 결과 공개, 이해충돌방지 규정 등
- (장학생·특기생 선발) 선발기준 및 평가 세부항목, 심사 재량 적정성, 심사위원 구성 등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사후관리(이행점검)

- (서면점검) '22년~'25년 간 실시한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권고 7,705건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현황 점검

< 자치법규 개선권고 현황 >

권고연도	대상기관	개선권고
2022	79개 기초 시·군·구	1,972
2023	17개 광역 시·도 및 61개 자치구	2,199
2024	86개 기초 시·군	3,162
2025	17개 광역 시·도 및 69개 자치구	372

- (현장점검) 이행 저조기관 대상 담당자 이력관리, 현장 컨설팅 등 맞춤형 이행관리(수시)

[협조 요청 사항]

- 교육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17개 시·도 교육청)
 - 부패영향평가 필요 자료, 권고안 의견조회 등 요청 시 협조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 이행 및 현황점검에 대한 협조(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
 - '22년~'25년 간 실시한 개선권고 미반영 기관의 경우 조속한 제·개정 추진 요망
 - 개선권고 이행현황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 요청에 적극 협조

1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수준 향상 촉진

- ◇ 미래세대 청렴 교육 확산 기반 마련 및 평가체계 정교화로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소통·환류 체계를 강화해 각급 기관 반부패 노력 지원
- ◇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종합청렴도 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마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평가로 평가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평가대상 합리화) 미래세대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 평가를 확대* 하고 **국정과제**,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부패취약분야** 집중 평가

* ('25년) 16개 → ('26년) 33개(4년제 국공립대학 29개 및 과학기술원 4개)

** '25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미흡기관, 부패사건 모니터링 결과,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부패 수준 취약분야 선정

※ 중앙·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공통),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특화) 등 600여개 기관

- (평가지표 개선) '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정부 조직개편 및 국정과제 현황 등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 영역별 지표 정교화

- (감점 영역 통합) 기존 개별 영역에서 감점되던 체계를 '청렴도 감점' 영역으로 통합해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신규추진**

※ 청렴도 감점 영역 통합 체계(안)

기존	청렴체감도(60%) + 청렴노력도(40% 감점 48점) - 부패실태 평가(최대 10%) ※ 신뢰도 저해행위(평가자료 누락·미제출 등)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26년	청렴체감도(60%) + 청렴노력도(40%) - 청렴도 감점*(최대 15%) * 청렴도 감점 = ㉠부패사건 발생 +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 ㉣신뢰도 저해 등

- (청렴체감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측정 업무를 정비*하고, 설문 문항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응답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별 주요 업무 및 부패 개연성 높은 업무 등 검토
- (청렴노력도) '25년 지표별 달성률, 효과 등을 분석하고, 국정과제를 고려해 각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지원할 핵심지표 위주로 개선
 - ※ 전년대비 변경 예정인 일부 지표 조기 안내(1월), 세부평가 기준, 배점 등은 기본계획 수립시 공개(2월),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계획에 최종 확정·반영(5월 초)

□ 소통과 환류를 통한 청렴도 평가의 효과성 제고

- (소통 강화) 평가체계, 평가지표 관련 평가 대상기관의 개선방안·아이디어 등 의견수렴*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관 유형별 맞춤형 워크숍 개최
 - ※ 공공기관 대상 공문 등 의견수렴(~2월) 및 기관 유형별 워크숍 개최(3월)
- (활용 확대) 각급 기관 우수시책 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굴·전파하고, 반부패 정책 국외연수 등 유인 제공
 - ※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참여 기회 제공

□ 종합청렴도 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 마련

- (정책연구용역 실시)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및 세부기준, 조사 및 측정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점검을 통해 정교한 평가 체계 정립 **신규추진**
 - ※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가칭)'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 (평가기준) 체감도, 노력도 등 평가 영역별 기준, 반영비율 등 현행모형 점검·분석
 - (조사·측정방법) 전화, 온라인 등 조사 방법별 실효성 점검 및 변화방향 분석, 조사 표본량, 통계적 유의성 등 관련 측정방법의 정교화 방안 마련
 - (환류시스템) 데이터 수집·융합·관리 체계화, 청렴컨설팅 등 평가 환류시스템 강화 등
- (학술대회 개최) 청렴도평가 25주년 계기, 디지털 기술 발전, 부패 유형의 진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평가 발전 방안에 대한 학계 의견 수렴 **신규추진**
 - ※ AI 기반 청렴도분석 모델 개발, 평가체계 혁신, 해외 기술 전수 방안 등 발전 전략 모색

[협조 요청 사항]

○ '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후속조치(평가 대상기관)

- 평가 결과(등급)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2.10.)

※ '25년도 평가 대상기관 중 미제출 기관은 조속히 제출 요청

- '25년도 평가결과 분석 등을 통한 '26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및 기관장 주관 회의 등 실시

※ '26년도 평가지표는 '25년도 지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되 변경 예정인 일부 지표는 조기 안내(1월)

- 청렴도 우수기관 업무담당자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수요조사 회신

※ 대상기관(약 20개)은 별도 공문 안내 예정(2월 중)

○ '26년도 평가 기본계획(2월) 관련 의견 제출(~3월, 평가 대상기관)

- 측정업무 추가·변경 등에 관한 의견 적극 제출(공문, ~2월)

-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적극 참여(3월 예정)

○ '26년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 등 협조(평가 대상기관)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자료 및 부패실태 자료 제출, 청렴노력도 실적 자료 등 평가자료 제출

※ 자료제출 내용 및 시기는 제출시기별로 별도 안내(공문 등) 실시 예정

※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기준 확인 및 철저한 검수·확인 요청

-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 충실성, 신뢰도 저해행위 여부 등에 대한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 사항 협조(하반기)

※ 점검 대상, 추진 일정 및 방식 등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종합청렴도 부진기관에 대한 청렴도 향상 노력 지원

- (청렴컨설팅 개요) 종합청렴도 부진기관^{4~5등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수기관^{1~2등급}의 청렴정책을 벤치마킹해 자체 청렴도 개선 대책 수립을 지원

* '26년 청렴컨설팅 대상 그룹(멘토1+멘티) 수 : 전년도와 동일한 **14개 그룹 선정**

- (청렴컨설팅 효과 지속성 유인) '25년 컨설팅 완료한 기관에 대한 설명회 및 부패방지교육 지원*을 통해 청렴도 노력 지속 지원 **신규추진**

* 부패방지교육 지원 : 컨설팅 이후 등급 미상승 기관의 수요를 통해 '인사예산' 등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대상 방문교육 추진

- (심층 진단·분석 운영 개선) 일반컨설팅 대상기관중 5등급 등 저조기관을 우선적으로 심층진단*하고, 전년도 심층진단 완료기관(7개)의 청렴시책 개선 이행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청렴노력 개선 유인 **신규추진**

* 심층진단분석 : 기관 내·외부의 고착화된 부패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내부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진행, 컨설팅 참여 멘티중 일부('25년 7개 기관)를 선정

[컨설팅 주요 일정(안)]



2 공직자 교육 수요를 반영한 부패방지교육

- ◇ 교육대상별·업무분야별 맞춤형 청렴교육, 교육 이수율 점검 및 이수율 저조기관 대상 밀착 지원 강화로 공직자의 청렴역량 강화

□ 교육대상별 특화 청렴교육 제공(참고1 참조)

- (대면교육 의무자)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대면교육 이수 의무인 신규·고위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과정 운영

과정명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신규 공직자 과정	승진 공직자 과정 신규추진
교육내용	고위직이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 교육 및 조직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토론 등 진행	신규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정책 등을 게임·현장학습 등을 통해 재미있게 습득	반부패 정책·법령교육과 공연 등 참여형 교육으로 승진자의 청렴 역량 강화
횟수·일수	연 8회, 1일	연 8회, 2~3일	연 8회, 1일
교육인원	회당 40명 내외		

- (변화대응형) 국정철학을 청렴의 관점에서 정립하고, 공직사회 및 AI 기술 환경변화에 최적화된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 신설 국정과제 신규추진

과정명	국정철학과 청렴	청렴리더십	청렴의 이해	AI-데이터 청렴역량
교육내용	반부패와 청렴의 관점에서 국정 철학·헌법가치·공직가치 등을 재정립하고 이해	부패·갈등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조율 및 올바른 의사결정, 실천·책임 역량 향상	청렴의 중요성 인식 및 스스로 청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소양 및 역량 형성	AI를 활용하여 부패취약요인을 조기 발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횟수·일수	연 2회, 1일	연 2회, 1일	연 2회, 1일	연 1회, 2일
교육인원	회당 40명 내외	회당 40명	회당 40명	회당 30명

- (업무분야별) 계약·예술체육·연구개발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사례를 바탕으로 담당자의 부패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과정 운영

과정명	계약	예술체육	인사	공사감독	교육행정	감찰장교	연구개발
교육 내용	해당 분야 맞춤형 반부패 법령 교육 및 사례 분석, 전문가 초빙 강의						
횟수·일수	2회, 1일			1회, 1일			
교육인원	회당 40명	회당 80명	회당 40명				회당 80명

- (청렴업무 담당자) 각급 기관 청렴업무 담당자의 심도 깊은 반부패 법령·정책 학습을 위한 ‘내부강사 양성과정’, ‘공직자 청렴 역량 심화과정’ 운영

과정명	내부강사 양성과정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교육내용	청렴업무 담당자의 청렴 전문역량 향상을 위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적 학습 및 최신 동향 교육	
횟수·일수	연 3회, 3일(실시간 온라인)	연 3회, 5일
교육인원	회당 600명 내외	회당 40명 내외
비고	과정 수료 후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내부강사 자격 부여	감사·청렴업무 담당자에 한해 교육 이수 시 내부강사 자격 부여

- (권익구제·갈등관리 과정) 기존 권익구제 중심의 교육에서, 복합·집단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실무를 추가한 통합 교육 추진

구분	권익구제+갈등관리 신규추진	행정심판
과정명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강화 과정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처리 법령·제도 이해 및 대응방법 및 사례 탐구 · 분야별 제도개선 및 집단갈등 해결 사례 공유 · 갈등 대응 노하우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 이론 및 제도의 이해 · 정보공개청구 등 행정심판 관련 주요 법령의 이해 · 답변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횟수·일수	연 6회, 3일	연 4회, 1일
교육인원	회당 40명 내외	회당 100명 내외

- **(방문교육)** 기관 특성 및 교육 대상의 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
 - **(청렴라이브)** 반부패·청렴특강과 문화·예술 공연을 결합한 콘서트 형식의 찾아가는 방문교육인 ‘청렴Live’ 운영(연 80회)
 - ※ 수요조사 기 실시(1월), 기관장·고위직 참석률, 교육인원, 기 교육 여부, 청렴도 등급 등 고려하여 대상 선정(교육 일시·내용은 기관 선정 후 협의 통해 결정)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지방의회의원 및 구성원 대상 갑질예방 특강, 청렴서약식 등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정립 지원(연 50회 내외)
 - ※ 연초 지방의회 대상 수요조사 실시(~1월말) 및 교육 대상 선정 완료(2월)

□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양성을 통한 각급 기관 자체교육 지원

- **(콘텐츠 보급)** 기관 자체 청렴교육 활용을 위해 국가청렴권의 교육원 개발 이러닝 과정 운영 및 교육·영상 콘텐츠 등 적극 배포
 - ‘나라배움터’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27개 과정 이러닝 과정 운영(2월~)
 - ※ 매월(2~11월) 1일~25일경 운영(구체적인 이러닝 과정은 참고2 참조)
 - 국가청렴권의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콘텐츠 확인 및 활용 가능
 - ※ 구체적인 콘텐츠 내역은 참고3(국가청렴권의교육원 개발 교육 콘텐츠 목록) 참조
- **(강사제도 운영)** 각 공공기관의 자체교육 활성화 및 양질의 청렴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내부강사·전문강사 양성
 - 기관 업무 이해도가 높은 청렴·감사업무 담당자를 내부강사로 양성, 수료 시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가능*
 - * 「내부강사과정」 교육 수료평가 또는 「공직자 청렴역량 향상과정」 교육 수료 시 자격 인정
 - 반부패 법령·지식 및 강의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전문강사 양성 과정 수료·필기시험·강의시연 평가 등을 통해 선발·양성(26.1.1. 기준 총 457명)
 - ※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전문강사 대상 최신 반부패 동향, 강의기법 등 보수교육 과정 운영

□ 법정의무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 공직자는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 필요
 - 신규자와 승진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고위직(기관장 포함)은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의거, **대면교육 이수 대상자**로 지정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시행령 88조의2
-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및 이행계획서 징구**

- (교육실적 점검)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준수 여부 관련, 전년 한해 동안의 공공기관 교육운영 실적 점검 실시

구 분	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 대학	공직 유관단체
			광역시	기초	광역시	기초			
대상 기관수	2,148	51	17	226	17	226	17/176 (193)	48	1,370

- '25년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추진 실적을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취합 및 점검(서면, 현장점검 등) 실시
-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거나 교육실적을 부실하게 제출한 기관 등 추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 ※ 현장점검 시, 교육지침 안내 및 의견수렴 등 컨설팅 병행 예정
- 공공기관 유형중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국공립대의 경우 분기별 실적조사 및 분기별 현지점검 실시 **신규추진**

【'24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적점검 결과】

- (전체공직자 이수율)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96.0%**로 전년대비 **0.1%p 하락**
 - ※ ('19)93.1% → ('20)93.3% → ('21)95.0% → ('22)95.6% → ('23)96.1% → ('24)96.0%
- 공공기관 유형중 교육청의 이수율(98.8%)이 가장 높은 반면, 국공립대학 이수율(73.7%)이 가장 저조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구 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국공립 대학	공직유관 단체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이수율	96.0%	96.7%	93.6%	92.6%	93.3%	93.4%	98.8%	73.7%	96.8%
전년대비 증감율	▼0.1%p	-	▼0.5%p	▼0.8%p	▲1.5%p	▲0.2%p	▲0.2%p	▼2.2%p	▲0.8%p

- 고위직(기관장 포함) 등 대면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율도 전년 대비 **0.8%p** ('23년 91.2%→ '23년 92.0%) 상승

- (교육 지원) '26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온라인 설명회, 교육여건
취약 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등 현장 담당자의 체계적 제도운영 지원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시,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내용 및 '26년
종합청렴도 평가관련 청렴교육 이수율 관리 방법 안내 예정
 - ※ '26년부터 기존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외에 전체 공직자, 신규승진자의 청렴교육
이수율을 추가로 평가
 -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연중)' 실시
 - ※ 위원회 직원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부패방지법령 강의를 무료로 진행

[협조 요청 사항]

< 교육과정 운영 관련 >

- 방문교육 운영 시 시설 준비 등 협조 요청(해당 기관)
- 매월 집합교육 안내 및 교육생 모집 시 소속기관 통보 및 적극 홍보(전 공공기관) ※ 교육 1개월 전 공문을 통해 교육 과정 및 교육생 모집 안내
-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고위직·신규자 등) 및 교육 희망자에 대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 파견 등 협조(전 공공기관)
- 자체 교육 시 청렴교육 강사(내부강사·전문강사) 적극 활용(전 공공기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전문강사 검색 및 강의 요청 가능
- 자체 교육 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 콘텐츠 활용(전 공공기관)
※ 교육콘텐츠는 교육원 홈페이지·유튜브(권익비전)을 통하여 활용하거나, 교육원에 공문 발송(수신처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운영과)을 통하여 요청

<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관련 >

- '25년도 청렴교육 실적 제출(전 공공기관)
 - '25년 한해 동안 각급 기관에서 실시한 청렴교육 실적을 청렴포털 시스템*에 입력·제출(~2.29) * 청렴포털 주소 : <http://ep.clean.go.kr>
- 「'26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온라인 설명회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온라인 설명회는 '26. 2월 중 실시 예정
- '25년 청렴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4월~5월) 시 협조(해당 기관)
 - 교육실적 부진,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 교육안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3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국정과제 신규추진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미래세대가 어린시절부터 청렴·윤리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 '25년 일반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국민권익위원회) >

- 학생·민간기업 직장인 대상 청렴교육·홍보 필요하다는 의견 : 75%
- 대학에서 청렴 관련 정규교과를 개설·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 63.7%

- (초·중·고) 권익위가 청렴교육의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 등은 이를 반영해야 할 근거 마련

※ 유사입법례 : 「통일교육 지원법」은 통일부장관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교육감은 이를 반영토록 하고 있음

- (대학생)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각 대학의 장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 실시토록 함

※ 유사입법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경비 등 지원) 필요 시 청렴교육 실시를 위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

[협조 요청 사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26. 1~2월(예정),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

4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지원

- ◇ 공기업 등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 지원 및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각급 기관 자율적 반부패·청렴활동 지원

□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 지원

- 국내외 반부패 규범 강화, ESG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에 공기업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지원

* 청렴윤리경영 CP: 공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방·탐지·개선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활동(Compliance Program)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CP를 분석하고 공통·핵심사항을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개정본)'('23.6월),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24.12월) 배포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지원 기관 선정(상반기, 15개 내외) 및 전문가 매칭, 규모·산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실시(연중)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통해 최신 국제 반부패 규범 및 ESG 동향, 국내·외 윤리경영 사례 등 정보 제공(월 1회)

※ 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정보 → 대외협력 →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게시

□ 각급 기관 청렴시민감사관 도입·운영 지원

- 청렴시민감사관* 및 실무자 대상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워크숍 개최(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 대상 연 3회)

* 청렴시민감사관 :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감사요청·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객관적인 외부통제 활동 실시

※ '25년 청렴노력도 평가대상 기관(233개) 중 232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중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기관 우수사례집 발간·배포(상반기)
 - ※ (주요내용) 기관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다양한 우수사례 소개 등
- 신규 도입 희망기관, 운영 미흡기관 등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수시)
 - ※ (주요내용) 제도 운영 관련 가이드 라인 제시, 직무 교육 지원 등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수시)
 - ※ (대상) 2025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우수 기관 등

[협조 요청 사항]

-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의 청렴윤리경영 CP 자율 도입 추진 독려(기관 자율)
 - ※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23.6월, 개정본) 참고
: 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정보 → 대외협력 →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게시
-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및 간담회, 우수사례 발굴 적극 참여 협조 (전 공공기관)
 - ※ 구체적인 일정 등은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 간담회 참석 대상은 '25년 청렴노력도 우수 기관 중 선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맞춤형 컨설팅 수요 제출(희망 기관)

III

기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행정기관] 2026년도 반부패·청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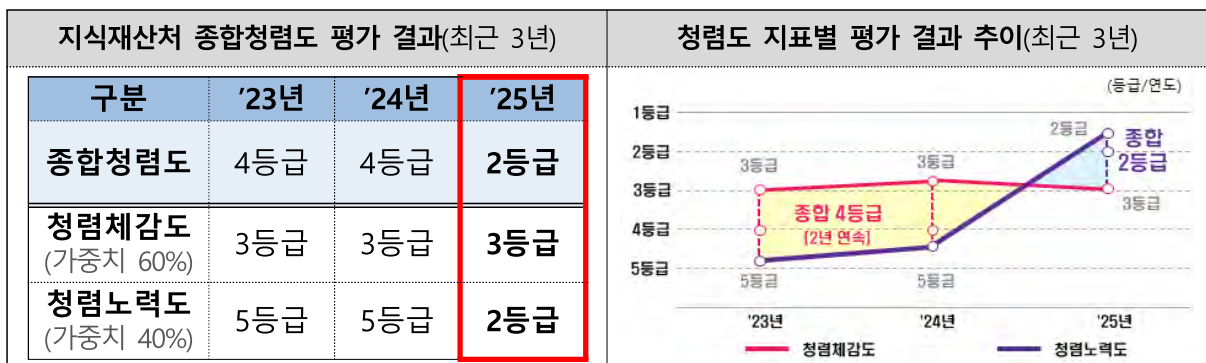
□ 지식재산처 역할

-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
「정부조직법」 제28조 제1항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자산을 통합관리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 2025년 지식재산처 종합청렴도 평가의 성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정부부처·공공기관 등(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지재처는 2년 연속^(23~'24) 종합 4등급으로 평가
 - * (평가기준) 청렴체감도 (9개 항목 설문) + 청렴노력도 (28개 지표 정량·정성 평가) - 부패실태 (평가기간) 전년도 10월 1일에서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의 실적
- 청렴도 평가는 단순히 기관의 청렴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및 기관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요소임
- 2025년 지식재산처 **종합 2등급** 달성(전년 대비 2등급 상승)
 - 청렴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전년 대비 3등급 상승



BEFORE ('24년 실적)	AFTER ('25년 실적)	효과
기관장 주재 회의 실적 0회	기관장 주재 회의 실적 3회	기관장 솔선수범
고위직 청렴교육(대면) 이수율 80%	고위직 청렴교육(대면) 이수율 100%	고위직 인식 개선
청렴문화 조성·확산 활동 부존재	청렴슬로건 공모, 공문서 표제부 활용	구성원 문화 조성
지재처·산하기관의 청렴 소통채널 부재	기관장 주도의 청렴 협의체 활동	대내외 소통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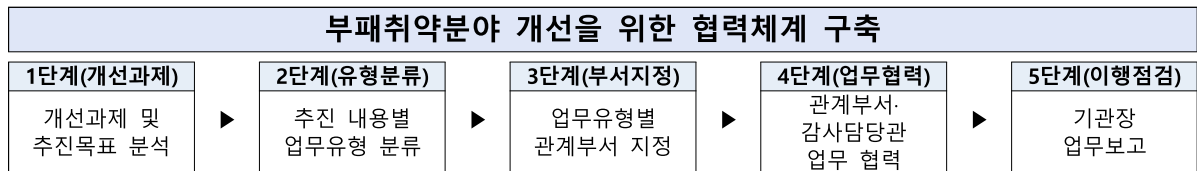
□ 기존 방식과 다른 체계적 접근

- **(중점추진)** 「고유업무특성」 과 「내·외부관계자 의견」 을 통한 과제 도출
 - (고유업무) 내·외부 현황 등을 기반하여 심사·심판 고유업무특성 발굴
 - (위험요소) 내·외부 관계자를 통한 부패취약분야 중점개선과제 선정
 - (취약분야) 청렴 문화 조성, 부패취약 환경 및 제도 개선 등 중점 추진

개선과제	추진 목표 및 추진 내용
제도개선	심사·심판 업무의 이해충돌 최소화를 위한 환경·제도 개선 ①심사개선 ②심판개선 ③인식강화
청렴문화	기관장 주도·구성원 참여형 청렴 문화 조성 ①대내협력 ②문화확산 ③대외협력
실태개선	민간기관 연계 부패요인 차단 및 인식 개선 ①부패차단 ②외부제재 ③인식개선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리더십을 기반한
지식재산처만의 제도·문화 등으로 확산하여
전방위적 청렴 행정 실현**

- **(추진체계)**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 관계부서 지정·실행력 강화
 - (애로사항) 관계부서의 수동적 정책 추진으로 능동적 과제 실행 어려움
 - (극복방안) 개선과제별 관계부서를 지정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기관장 포함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 활동

- 지식재산 생태계의 부패취약분야 도출·개선 노력 및 기관장 주도·구성원 참여형 현장 소통* 활성화를 통한 대내외 청렴문화 조성

* 처장·산하기관장 주축 ‘청렴리더 그룹’과, 각 기관의 청렴 부서장주축 ‘청렴 활동가 그룹’ 운영, 기관별로 분산된 청렴정책 통합 추진 기반 마련



청렴협의체 발대식



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유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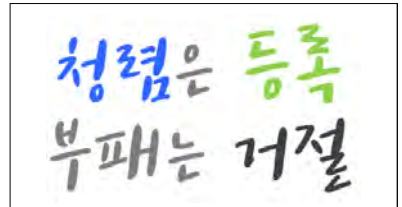
청렴협의체 청렴리더 회의



구성원 슬로건 공모



구성원 선정작 투표



청렴 슬로건 이미지

- (심사개선) 심사시스템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기능 고도화 완료 및 시행

(사전신고) 심사관이 시스템에 사적이해관계자 정보(임용전 2년 이내 재직처 등)를 사전 입력시, 대상자의 심사건은 신고자를 자동 배제되도록 구현

(인지신고)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심사건에 대해 "인지신고" 기능으로 신고 및 조치하고, 향후 자동 배제되도록 구현

- (심판개선) 심판업무의 이해충돌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지침 개정

「특허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특허청 감사담당관을 특허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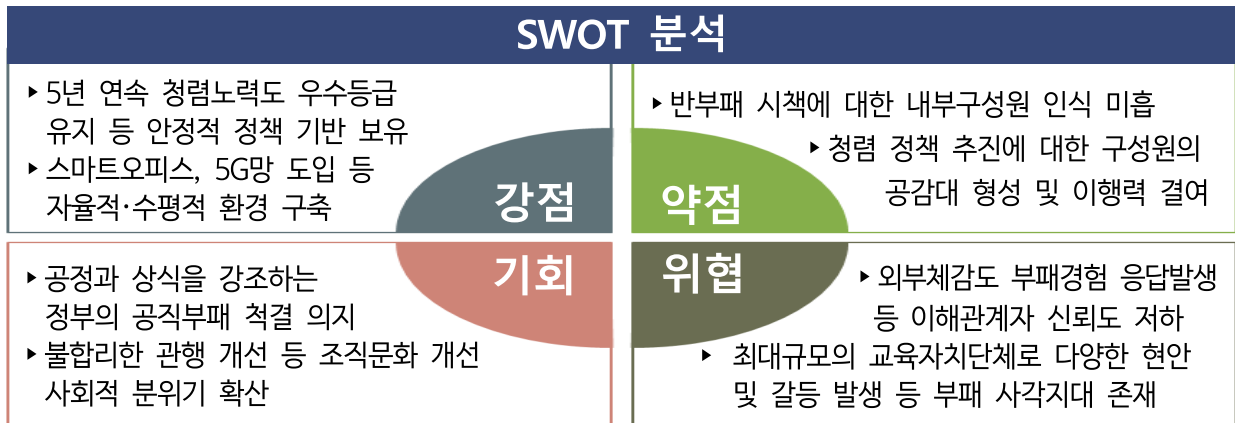


「지식재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식재산청 본청과 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본청 감사기구의 장을, 특허심판원은 심판정책과장을 지식재산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이하 생략)

□ 기관 현황

- (조직구성) 본청(남부, 북부, 조원동), 교육지원청(25개), 직속기관(40개)
 - * 학교 수(유·초·중·고 4,680교), 학생수(15만명), 교직원수(18만명) 전국 최대규모
- (청렴 환경)



□ 청렴도 평가의 변화

- (청렴도 평가)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이후, 3~4등급의 답보 상태를 극복하고 '24년 종합청렴도 2등급, '25년 청렴노력도 1등급 최초 달성
- (청렴도 평가)

구 분	2023	2024	2025
종합청렴도	3등급	(최초)2등급	(연속)2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	2등급	(최초)1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	3등급	4등급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주요 사례

① (제도 정비) 현장 중심 청렴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조례 개정)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조례명 개정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념 구체화	제2조(정의) 직장 내 괴롭힘	제2조(정의) 직장 내 괴롭힘 + 갑질 ▶ “ 갑질 ” / “ 직장 내 괴롭힘 ” / “ 2차 가해 ” 명시
피해자 보호 강화	제3조(적용범위) 공립학교 →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제3조(적용 범위) 공립학교 + 사립학교 포함 ▶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피해자 보호 강화	신설	제8조(갑질 발생 시 조치) ▶ 조사 중 분리 조치
	신설	제9조(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 2차 피해 방지

※ 다양한 구성원의 폭넓은 사전 의견 청취·반영으로 조례 규정 실효성 확보

- (조례 제정, 직위 신설)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 다변하는 청렴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청렴전문관’ 직위 신설 등 지속가능한 부패방지 체제 기반 구축

② (현장 지원) 구성원 부패인식 개선 및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 (교육 지원) 구성원 갑질 인식개선 및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 갑질 예방 교육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지침」) 통합 개정된 조례를 반영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공통 업무처리 기준 신설 발간 추진

③ (청렴 리더십) 기관장의 주도의 청렴 솔선수범, 소통 강화

- (업무협약) 국민권익위원장-경기도교육감 간 「청렴 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상호기관장 「청렴 숏터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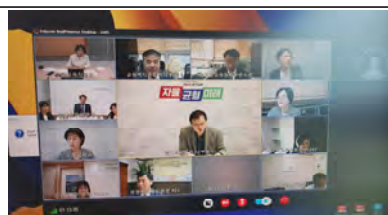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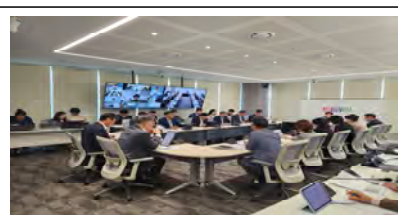
국민권익위-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 청렴 숏터뷰



권익위원장-청렴 주니어보드 소통 간담회



- (교육감 주관 회의체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 환류 강화



교육감 주관 청렴 회의체 운영 (실시간 영상회의)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 (청렴 역량 강화) 2025 OECD 글로벌 반부패 포럼 및 선진기관 방문 국제 교류협력 국외 연수 실시(청렴 담당자 9명, 프랑스 파리, '25.3.)

※ 프랑스 고위공직자 윤리위원회(HATVP), 프랑스 국가 청렴청(AFA) 관계자 협의



OECD 글로벌 반부패 포럼 및 청렴 공공기관 관계자 간담회

MZ 청렴 교류회

④ (구성원 참여 확대) 현장의 자발적·능동적 청렴 실천 여건 조성

- (청렴마일리지 운영) 구성원의 청렴 이행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교육지원청 청렴 시책 추진을 점수화하여 지속가능한 청렴 정책추진 동력 확보

※ 우수기관 표창(기관, 개인)

-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발굴·개선) 현장에서 지속되어 온 낡고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선정하여 홍보 및 실천으로 등 조직문화 개선 유도

➔ 2025 "내가 직접 선택하는 현장 속 낡고 불합리한 관행"

☞ 신규임용, 승진, 발령 시 답례품 제공 관행 근절 (26.4%)

- (청렴 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장에서 추진한 청렴 조직문화 개선·성과를 발굴하고 구성원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 마련

※ 교육지원청·학교 등 10개 기관의 우수사례 선정 ☞ 기관·개인 표창 / 총 500만원 상금



- (다양한 채널의 청렴 홍보) 홈페이지, 청사 엘리베이터DID, 유튜브, 업무포털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 채널 다각화로 청렴활동 홍보 강화





참 고 자 료

[행정기관]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1

'26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 운영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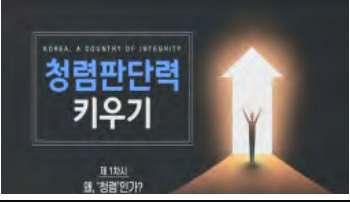




※ 교육일정은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일정은 매월 교육 신청 안내 공문을 통해 공지될 예정(미기재 교육과정 포함)

월	과 정 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2월	대학 청렴교육 강의역량 강화	1기	15명	2.3.(화)~2.4.(수)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온라인)	1기	250명	2.26.(목)
3월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1기	600명	3.3.(화)~3.5.(목)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1기	40명	3.4.(수)~3.6.(금)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1기	40명	3.10.(화)~3.12.(목)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1기	40명	3.11.(수)
	계약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1기	100명	3.12.(목)
	행정심판 역량강화	1기	100명	3.13.(금)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1기	40명	3.16.(월)~3.20.(금)
	승진자 청렴교육	1기	40명	3.17.(화)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1기	40명	3.26.(목)~3.27.(금)
4월	국정철학과 청렴	1기	40명	4.3.(금)
	AI·데이터 활용 청렴역량 강화	1기	30명	4.6.(월)~4.7.(화)
	청렴윤리경영 최고관리자 과정	1기	40명	4.7.(화)
	청렴의 이해	1기	80명	4.7.(화)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2기	40명	4.8.(수)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1기	40명	4.8.(수)~4.10.(금)
	사회초년생 청렴교육(원내)	1기	40명	4.13.(월)~4.14.(화)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강화	1기	40명	4.14.(화)~4.16.(목)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정책·법령)	1기	50명	4.20.(월)~4.23.(목)
	승진자 청렴교육	2기	40명	4.21.(화)
	인사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1기	40명	4.23.(목)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2기	40명	4.27.(월)~4.29.(수)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2기	40명	4.29.(수)~4.30.(목)

월	과 정 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5월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2기	40명	5.7.(목)~5.8.(금)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강화	2기	40명	5.13.(수)~5.15.(금)
	청렴윤리경영 심화과정	1기	40명	5.18.(월)~5.20.(수)
	승진자 청렴교육	3기	40명	5.19.(화)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3기	40명	5.20.(수)~5.22.(금)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3기	40명	5.20.(수)
	공사감독 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1기	40명	5.21.(목)
	청렴리더십	1기	40명	5.27.(수)
6월	교육행정직/교직원 부패대응역량	1기	40명	6.5.(금)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2기	40명	6.8.(월)~6.12.(금)
	청렴도평가의 이해	1기	80명	6.10(수)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4기	40명	6.12.(금)
	행정심판 역량강화	2기	100명	6.12.(금)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2기	600명	6.16.(화)~6.18.(목)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4기	40명	6.18.(목)~6.19.(금)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3기	40명	6.23.(화)~6.25.(목)
	연구개발분야 부패대응역량	1기	80명	6.25.(목)
	승진자 청렴교육	4기	40명	6.26.(금)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역량 향상과정	1기	30명	6.30.(화)~7.1.(수)
7월	청렴윤리경영 심화과정	2기	40명	7.7.(화)~7.9.(목)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3기	40명	7.8.(수)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5기	40명	7.9.(목)~7.10.(금)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5기	40명	7.10.(수)
	대학 청렴교육 강의역량 강화	2기	15명	7.13.(월)~7.14.(목)
	국정철학과 청렴	2기	40명	7.14.(화)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강화	3기	40명	7.15.(수)~7.17.(금)
	승진자 청렴교육	5기	40명	7.16.(목)
8월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강화	4기	40명	8.19.(수)~8.21.(금)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6기	40명	8.19.(수)
	반부패법령 해석 심화	1기	80명	8.21.(금)
	사회초년생 청렴교육(원내)	3기	40명	8.24.(월)~8.25.(화)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4기	40명	8.25.(화)~8.27.(목)
	승진자 청렴교육	6기	40명	8.25.(화)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3기	600명	8.26.(수)~8.28.(금)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3기	40명	8.31.(월)~9.4.(금)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4기	40명	8.31.(월)

월	과 정 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9월	청렴윤리경영 최고관리자 과정	2기	40명	9.1.(화)
	청렴의 이해	2기	80명	9.2.(수)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6기	40명	9.10.(목)~9.11.(금)
	계약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2기	40명	9.10.(목)
	행정심판 역량강화	3기	100명	9.11.(금)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정책·법령)	2기	50명	9.14.(월)~9.17.(목)
	승진자 청렴교육	7기	40명	9.15.(화)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7기	40명	9.18.(금)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5기	40명	9.28.(월)~9.30.(수)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3기	40명	9.30.(수)~10.2.(금)
10월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8기	40명	10.7.(수)
	청렴윤리경영 심화과정	3기	40명	10.12.(월)~10.14.(수)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강화	5기	40명	10.14.(수)~10.16.(금)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7기	40명	10.21.(수)~10.23.(금)
	부패상황 문제해결역량 강화	1기	40명	10.27.(화)~10.28.(수)
	청렴리더십	2기	40명	10.28.(수)
11월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6기	40명	11.2.(월)~11.4.(수)
	승진자 청렴교육	8기	40명	11.3.(화)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4기	40명	11.4.(수)~11.6.(금)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강화	6기	40명	11.11.(수)~11.13.(금)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역량 향상과정	2기	30명	11.17.(화)~11.18.(수)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5기	40명	11.24.(화)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8기	40명	11.26.(목)~11.27.(금)
12월	행정심판 역량강화	4기	100명	12.4.(금)

과정명	차시	인정시간	주요내용
<p><청렴, 다른 나라는 어떨까></p> 	2	2시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고,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부패 이슈를 알아보며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
<p><청렴 북 콘서트></p> 	5	1시간	인문학, 심리학 분야의 청렴 관련 필독서 내용 소개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이해
<p><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p> 	7	3시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목민심서(청심, 병객, 절용, 절제)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p><이순신 장군의 청렴리더십></p> 	8	3시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청렴하고 강직했던 일화를 통해 공직자가 지녀야 할 공직 윤리 확립 ※ 일반과정, 수어과정 별도 운영
<p><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p> 	10	3시간	각 지역의 청렴 사적지와 역사 속 일화를 현대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청렴인식 확산 ※ 일반과정, 수어과정 별도 운영
<p><문화와 생활 속 청렴></p> 	2	2시간	역사, 영화 등 인문학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패방지 법령을 이해하여 생활 속 청렴을 실천
<p><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 2></p> 	2	2시간	갑질 문화, 부패스캔들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의와 청렴윤리에 대하여 재인식하고, 해외의 부패방지법을 우리나라 법과 비교 학습하며 법령에 대한 입체적 이해도 제고

과정명	차시	인정시간	주요내용
<p><부패상황 자각하기></p> 	7	3시간	청렴이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사례 학습을 통해 청렴역량 4구성 요소 중 '청렴민감성' 능력 제고
<p><부패앞에 단호해지기></p> 	8	4시간	부패와 의사소통, 부패를 예방하는 Key-communication, 대한민국의 반부패 관련법 숙지를 통해 부패를 단호히 배척할 수 있는 정신자세 확립
<p><청렴판단력 키우기></p> 	8	5시간	청렴 개념 및 청렴 4구성요소(민감성, 판단력, 동기화, 수행력) 이해 및 문제가 되는 상황 직면 시 청렴판단력 역량 제고
<p><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p> 	4	2시간	경찰·소방·국방 등 현장직군 공직자들이 현업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업무 수행 중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사례 및 실무 Q&A를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조직 내 대처역량 강화
<p><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p> 	4	2시간	채용 업무 진행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절차와 지침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정착 이해도 제고
<p><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p> 	4	2시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법 이해도 제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일반과정, 수어과정 별도 운영
<p><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p> 	5	2시간	공공재정환수법 도입 배경 및 제정 의의, 부정 청구 등에 따른 제재 및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주요 질문 및 유권해석 사례를 통하여 법령의 이해도 제고

과정명	차시	인정시간	주요내용
<p><청탁금지법의 이해></p> 	6	3시간	<p>청탁금지법 도입배경 및 제정의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법령 내용으로 구성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제고</p> <p>※ 일반과정, 수어과정 별도 운영</p>
<p><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p> 	8	3시간	<p>공익신고자 인터뷰, 실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의 중요성 및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 인지</p>
<p><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p> 	7	4시간	<p>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과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관련 사례를 통해 알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 및 공직사회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p>
<p><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p> 	15	6시간	<p>공직자 기본윤리,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청탁금지법,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공익신고 보호제도 등을 통해 반부패 관련 정책 및 법규 이해</p>
<p><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p> 	7	3시간	<p>청탁금지법 사례 학습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체적 이해도 제고</p> <p>※ 일반과정, 수어과정 별도 운영</p>
<p><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p> 	10	5시간	<p>부패영향평가의 평가기준별 사례학습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각급 기관에서 법령안 작성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 내재 여부를 자체 진단할 수 있는 법제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p>
<p><권익구제와 옴부즈만></p> 	10	4시간	<p>고충민원 처리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의 내실화에 기여 (※ 청렴교육과정이 아닙니다.)</p>
<p><행정심판 실무 입문></p> 	6	3시간	<p>행정심판 제도와 재결례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도모 (※ 청렴교육과정이 아닙니다.)</p>

연번	주요 내용		개발 시기
1		<조선 청백리를 통해 배우는 청렴강령> - 영상물 - 역사 속 청렴 인물과 주요 일화, 현대적 의미를 서경석 권익위 홍보대사가 해설해 주는 정보와 재미를 결합한 교육용 영상물	'25년
2		<청렴밴드가 부르는 청렴송 뮤직비디오> - 영상물 - 청렴콘텐츠 공모전 노래 부문 수상작을 편곡하여 신나는 밴드 공연과 노래로 청렴 메시지 전달	'25년
3		<청렴 영상툰> - 영상물 - 청렴콘텐츠 공모전 문학·로고송 부문 수상작을 생생한 영상툰으로 재구성하여 청렴 문화 확산	'25년
4		<청렴리더십 프로그램> - 강의자료 - 변화된 환경·역할에 따른 공직자의 청렴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할극·집단토론 등의 방식으로 프로그램 (4차시) 구성	'25년
5		<대학생 청렴교육 표준강의안> - 강의자료 -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을 위해 청렴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 청렴 실천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표준강의안 (15차시) 구성	'25년
6		<청렴의 나무, 함께 가꾸요> - 강의자료 - 초등학교에서 자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로, 사례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8종의 표준 강의안(각 2차시) 및 활용 안내 영상 제공	'25년
7		<지원쌤의 청렴 조희시간> - 영상물 - 초등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로 청렴 6덕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미래세대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 도모	'25년
8		<청렴채널 ①> - 영상물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반부패 관련 주제를 이용해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와 재미를 결합한 교육용 영상물	'24년
9		<교육 대상별 맞춤형 표준강의안 및 강사용지도서> - 강의자료 - 반부패 법령 교육(각 1종)과 더불어서 경찰·교직원·연구원 등 교육수요가 높은 직종 대상 맞춤형 사례 (각 6종) 구성	'24년

연번	주요 내용		개발 시기
10		<청렴 종합병원> - 영상물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다양한 에피소드로 각색하여 법령 이해도 제고	'23년
11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 영상물 -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를 시트콤 형식으로 표현하여 일상 속 청렴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23년
12		<매너가 오피스를 만든다> - 영상물 - 직장 내 부패 유형인 '갑질' 사례를 다룬 브이로그(V-log) 형태의 영상물을 통해 갑질 근절 필요성 강조	'23년
13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 - 이러닝 - 채용 관련 법령 및 채용 절차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여 공정채용 문화 확산	'23년
14		<청렴윤리경영의 이해> - 이러닝 - 청렴윤리경영의 정의와 배경, 국내외 동향 등 전반적인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	'23년
15		<청렴윤리경영 주요 사례 영상> - 영상물 - 청렴윤리경영의 등장배경, CP 등 기본 개념과 국내외 주요 사례를 캐릭터와의 대화 형식 등으로 풀어내어 흥미 유발	'23년
16		<청렴윤리경영 토론학습용 영상> - 영상물 -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을 단막극 형식으로 흥미롭게 구성해 토론학습의 몰입도 제고	'23년
17		<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 이러닝 - 경찰·소방·교정공무원, 군인 등 현장공직자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22년
18		<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 - 영상물 -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인 10개 행위 기준을 에피소드를 통해 쉽게 설명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	'22년
19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 ①, ②> - 영상물 - 이름도 비슷하고 인접한 두 국가(파라과이, 우루과이)의 청렴도가 크게 차이 나는 원인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설명	'22년
20		<부패로 큰코다친 나라들, 뇌물과 부패방지법> - 영상물 - 나라를 뒤흔든 세계 각국의 희대의 부패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해외의 반부패 입법 사례 소개	'22년



붙임

[행정기관]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반부패 법·제도 강화로 공직사회 체질 개선			
[1] 청탁금지제도 규범력 제고			
①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 협조	1월 ~	전 공공기관
②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참석	상반기	전 공공기관
③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자료 활용 및 전파 협조	1월, 9월	전 공공기관
[2]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로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협조	8~12월	전 공공기관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취약분야 확인·점검 협조	상반기	해당기관
③	자체 점검 등 이해충돌방지법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	연중	전 공공기관
④	지방선거 후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이해충돌방지법 의무사항 교육·점검	6월~	지자체· 지방의회
⑤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 교육 이행	연중	전 공공기관
⑥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참여	4~5월	전 공공기관
⑦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사건 조사·처리 협조	연중	해당기관
⑧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등 의견 공유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①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 제출	제·개정 완료시	전 공공기관
②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실태점검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4]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강화			
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활용	상시	전 공공기관
②	취업제한제도 즉시 안내 및 대장 관리	수시	전 공공기관
③	취업제한 실태점검, 제도 운영 확인 시 협조	수시	전 공공기관
[5]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체계 구축			
①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②	기관 차원의 신고자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화해방안 모색·협조 등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 노력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 결정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신속·충실 이행	연중	해당 기관
④	자체 사전검증 후 포상금 대상자 적극 추천	5월,10월	전 공공기관
⑤	신고포상금제도 실태조사 협조, 합동회의 참석	2월, 3월	중앙행정기관
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협조	상반기	해당 기관
⑦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자체교육 실시(연 1회 이상)	수시	모든 기관
⑧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관련 교육영상 공유 시 확산·배포 협조	하반기	모든 기관
⑨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 개최 시 적극 참여 협조	하반기	해당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2.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관행 근절			
[1] 실효적 반부패 대응체계 마련			
①	이첩·송부 사건 법정 처리기한 내 적극 이행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②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시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③	조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결과 자료 공유	수시	해당 기관
④	청렴포털의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 신속하게 지정	수시	해당 기관
⑤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상반기	해당 기관
[2] 공공재정 누수 방지 노력			
①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적극 협조	2~3월	해당 기관
②	위원회 주관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참여 및 기관별 자체 교육 적극 실시	수시	해당 기관
③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집중신고기간 홍보 적극 참여	수시	해당 기관
④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유공 포상 적극 추천	수시	전 공공기관
[3]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강화			
①	비공무원 채용 자체감사 실시	~9월	중앙·지자체·교육청
②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독기관 설명회	2~3월	해당 행정기관
③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독기관별 결과 회신	~10.23	해당 행정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4]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①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조회 등 협조	연 중	전 공공기관
②	이행현황 서면 점검 시 권고 이행실적 제출	~4월	전 공공기관
③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협조	연 중	전 공공기관
[5] 교육·자치법규 부패·불공정 유발 요인 개선			
①	교육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	3~10월	교육청
②	자치법규 개선권고 이행현황 제출(정기 서면점검)	3~6월	해당기관
③	자치법규 개선권고 부진기관 대상 현장점검	수시	해당기관
3.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 확산			
[1]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수준 향상 촉진			
①	'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후속조치 이행	연 중	평가 대상기관
②	'26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관련 의견 제출	~3월	평가 대상기관
③	'26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 점검 등 협조	연 중	평가 대상기관
[2] 공직자 교육 수요를 반영한 부패방지교육			
①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방문교육 운영 시 시설 준비 등 협조 요청	수시 (별도통보)	해당 기관
②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집합교육 안내 및 홍보 요청	~12월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③	교육생에 대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 파견 등 협조 요청	~12월	전 공공기관
④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 강사 활용 요청	상시	전 공공기관
⑤	자체 청렴교육 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콘텐츠 활용 요청	상시	전 공공기관
⑥	'25년도 부패방지교육 이행 실적 제출	~2월	전 공공기관
⑦	청렴교육(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참여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⑧	'26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 온라인 설명회 참여 협조	2월 중	전 공공기관
⑨	'25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 시 협조	4월~5월	해당기관
[3]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	'26.1~2월 (예정)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
[4]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지원			
①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 등 자율실천	수시	희망기관
②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간담회 적극 참여 및 우수사례 발굴 협조	수시	전 공공기관
③	청렴시민감사관 맞춤형 컨설팅 수요 제출	수시	해당 기관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정책 총괄과	전이슬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044)200-7213	044) 200-7939
	김종혁	부패방지교육 제도·운영, 교육실적 점검 및 관리	044)200-7616	
	유어진		044)200-7619	
청렴조사 평가과	백현수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3	044) 200-7940
	김희리		044)200-7632	
	김소리		044)200-7638	
	연나영		044)200-7636	
	박세아		044)200-7634	
	김선미		044)200-7635	
	안영인		044)200-7637	
	권택경		044)200-7629	
	윤종선		044)200-7639	
부패영향 분석과	안병민	교육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044)200-7665	044) 200-7941
	이나현	자치법규 개선권고 이행점검	044)200-7652	
청탁금지 제도과	박소형	청탁금지제도 업무 총괄	044)200-7703	044) 200-7944
	이경민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044)200-7704	
	박선미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교육, 홍보	044)200-7706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행동강령과	정철우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5	044) 200-7942
	박종완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0	
	이종윤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044)200-7677	
	서정민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입력	044)200-7685	
채용비리 통합신고 센터	이진아	채용실태 전수조사, 제도개선 등	044)200-7127	044) 200-7964
	백소망	채용실태 전수조사, 교육, 컨설팅 등	044)200-7711	
	김강우	채용비리 신고 상담, 조사·처리 등	044)200-7710	
	김보배	채용비리 신고 상담, 조사·처리 등	044)200-7291	
이해충돌 방지팀	권건우	국정과제, 제도 운영·기획	044)200-7674	044) 200-7963
	이예정	교육·홍보, 실태조사, 설명회, 유권해석	044)200-7679	
	박혜랑	교육·홍보, 운영지원, 유권해석	044)200-7621	
심사기획과	방경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044)200-7694	044) 200-7943
	김회성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0	
	권정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6	
	임성순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이첩사건 사후관리	044)200-7688	
	최승우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89	
부패심사과	정현준	부패신고사건 업무 총괄	044)200-7728	044) 200-7946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공공재정 환수관리과	이지현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044)200-7644	044- 200-7977
	신경윤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후속점검, 현지점검	044)200-7650	
	백인혁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홍보, 집중신고기간 운영	044)200-7582	
보호보상 정책과	유윤진	보호·보상정책 관리, 운영현황 실태조사	044)200-7754	044) 200-7948
	서지만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교육, 공익신고 관련 업무 안내서 및 운영 지침 표준안	044)200-7757	
	김혜윤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044)200-7755	
부패신고자 보호과	한세근	부패신고자 보호사건 업무 총괄	044)200-7777	044) 200-7949
공익신고자 보호과	최진경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업무 총괄	044)200-7332	044) 200-7949
	조수연	신고자 보호사건 이행점검	044)200-7335	
신고자 보상과	우명희	포상금 추천 관리 등 포상금 업무 총괄	044)200-7739	044) 200-7947
	권영훈	신고포상금제도 정비	044)200-7415	
민간협력 담당관실	우은주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044-200-7160	044) 200-7917
	이지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지원	044-200-7163	
제도개선 총괄과	김유정	제도개선 업무 총괄	044)200-7212	044) 200-7921
	진정인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044)200-7219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국가청렴 권익교육원	윤소영	국정철학과 청렴 교육 운영	043)901-6142	
	배영준	고위직·찾아가는 권역별 교육 운영	043)901-6132	
	장보정	청렴리더십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기획·개발	043)901-6131	
	조효민	내부강사 양성과정 운영	043)901-6145	
	김명혜	신규자, 청렴역량 심화, 부패상황 문제 해결 역량강화 과정 등 교육 운영	043)901-6133	
	김유현	청렴감성지수, 인사·계약·공사관리·예술 체육·연구개발분야 과정 교육 운영	043)901-6149	
	김성래	승진자, 청렴의 이해, 전문강사 보수교육 운영	043)901-6134	
	나은정	전문강사 양성 AI·데이터 활용 청렴교육 운영	043)901-6143	
	전현교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043)901-6153	
	안민형	권익구제·갈등관리, 행정심판, 이러닝 교육 과정 운영	043)901-6147	
	배유진	대학청렴교육 강의역량강화 과정 운영	043)901-6163	
	조윤서	사회초년생 청렴교육 운영	043)901-6164	